

AI 전환기 국방기술혁신정책의 과제  
이춘주(국방대학교 AI/로봇학과 교수)

트럼프 2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이왕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AI 전환기 국방기술혁신정책의 과제



이춘주(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장, AI/로봇학과 교수)

- AI, 로봇, 양자기술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국제질서와 안보 전략의 근본적 재편을 촉발하는 전환기적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기술 전환기에는 윤리·표준 정립, 전략적 니치(niche)관리, 기술동맹, 융합형 인재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국방 기술정책과 제도화된 국제협력이 요구됨
- 국방 분야는 기술 중심의 대응을 넘어서 전략·제도·교육 체계를 포함하는 총체적 설계를 통해 새로운 평화질서 형성의 선도자가 되어야 함

### 1. AI와 로봇기술의 전방위적 확장과 국방기술혁신 패러다임의 전환

2025년 9월,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AI가 설계한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세계 최초로 생성했다고 발표하며, '다음 단계는 AI가 만드는 생명체'라 언급했다. 같은 달, AP 통신은 우크라이나가 AI·로봇 기반의 무인차량과 드론을

전장에 투입해 병력을 보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무기는 인간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 않으며 지속 작전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AI와 로봇기술은 산업적 응용을 넘어, 전장 환경과 안보 전략의 근본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자율 무기체계, 지능형 지휘통제, 전장정보 분석, 인간-로봇 협업(HRI) 등은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병력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국방의 핵심

인프라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기술은 공학적 실현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질서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인쇄술은 정보 독점을 무너뜨리고 지식의 대중화를 이끌며 국민국가 형성의 토대를 마련했고,<sup>1)</sup> 핵기술은 군사·산업을 이증적으로 변화시키며 냉전 질서를 낳았다.<sup>2)</sup>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창출하며 정보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sup>3)</sup> 오늘날 우리는 AI, 로봇, 양자기술이 동시에 상용화와 전략 적용의 문턱에 도달한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AI는 산업, 교육, 의료, 안보 전 영역을 관통하며 인간의 인지·판단·결정 기능을 기술로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전장과 무기체계에 통합되면서 군사작전 방식과 전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는 단지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전략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핵기술이 권력의 축을, 인터넷이 정보의 전장을 바꾸었듯, AI는 정치·경제·안보 전반에서 질서의 재구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대규모 언어모델, 자율 시스템은 노동개념, 작전개념, 정보주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존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는 기술 구현이 즉각적으로 사회 구조와 권력질서에 충격을 주는 보기 드문 사례이며, 단순한 기술 적용을 넘어 전면적 전환 대응을 요구한다.

## 2. AI 전환기 국방기술혁신전략의 과제

AI, 로봇, 양자기술이 상호 결합하며 급속히 실용화되는 시점에서, 국방 분야는 이 기술혁신을 전략적으로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

첫째, 기술 수용이 아닌 전략 주도의 ‘전환혁신’을 달성하려면, 국방기술 정책에 ‘니치(niche) 관리’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sup>5)</sup> 이는 단순한 기술 수용이 아닌, 기술을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이정동 교수가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강의(2025)에서 강조했듯, ‘담대한 최초의 질문’과 ‘치열한 스케일업’이 전환혁신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조달 체계에서도 ‘니치관리’ 전략이 핵심이 된다. “국방기획관리제도” 또한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어야 한다. 민간 주도의 AI와 로봇 기술을 군사적 요구에 맞춰 신속히 적용하고 통합하기 위해, 기존 R&D 거버넌스 체계를 과감히 재설계해야 한다. 민군 간 협력 구조를 정교하게 통합하고, 기술 획득을 가속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첩한 제도 환경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응용 범위가 기존 무기체계 개발 주기를 넘어서는 지금,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작전 개념, 지휘 체계, 병력 구조 전반을 AI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표 1〉 기술혁신이론의 패러다임

기술	최초 개념/발명	공학적 완성 소요 기간	사회적 영향	주요 역할자 <sup>4)</sup>	기술혁신이론
인쇄술	1440년 (구텐베르크)	15년	국민국가 형성, 지식의 대중화	기업가, 기업	슈페터(Schumpeterian Theory)
핵기술	1938년 (핵분열)	7~16년	냉전 질서, 군사 패권구도	대학, 공공연구기관	신고전학파(Neoclassical Theory)
인터넷	1969년 (ARPANET)	25~30년	정보 질서 재편, 사이버전 창출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체제론 (National/Regional Innovation Systems)
인공지능	1956년 (다트머스회의)	65년 (지속 중)	전 사회·전장 지능화, 인간 행위 자동화	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사회단체, 재단, 일반시민	전환혁신이론 (Transformative Innovation Theory)

1) Anderson, B. (2006).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Revised ed.). London: Verso., pp.42-43. “이것(인쇄술)이 저것(건축)을 죽이리라” — 빅토르 위고는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이 한 문장으로, 시대정신의 대전환을 이야기했다. 지식과 권위가 석조 건축물에 새겨지던 시대는, 이제 활판 인쇄기에 실려 사람들의 손과 눈으로 옮겨갔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상상력의 권력을 재편하는 전환기의 도래를 상징하는 말이었다.

2) Rhodes, R. (1986).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New York: Simon & Schuster.

3) Reprinted as Chapter Two in John Arquilla and David Ronfeldt, eds., In Athena's Camp: Preparing for Conflict in the Information Age, RAND/MR-880-OSD/RC (1997), p.23.

4) 정선양 외(2023). 기술혁신이론의 진화: 슈페터에서 전환이론까지, 기술혁신연구, p.102.

둘째, 기술이 규범보다 앞서가는 상황에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무기체계, 감시·정찰 AI, 무인로봇 등 민감 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과 기술적 표준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범 대응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실행 가능하고 구속력

5) 정선양 외(2023), “전략적 니치관리는 새롭게 대두되는 지속가능한 기술이 급진적 혁신을 창출하고 견고한 시스템 및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실험을 할 수 있는 보호 영역(protective areas)이 필요~”.

있는 윤리·표준의 설계와 다자적 합의 도출에 있어 제도적 지체가 뚜렷하다.

특히 군사안보, 초국경 데이터 활용, 자율무기 시스템 분야에서 이러한 한계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은 단순한 성능 개선이 아니라 인권, 국제법, 작전규범과 직결되기에, 통제 기준과 책임 체계 없이 운용될 경우 전략적 불안정성과 예기치 못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기술동맹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AI, 로봇, 양자기술은 데이터, 알고리즘, 인재의 흐름 속에서 작동하는 개방형 생태계 기술이다. 이로 인해 단일국가의 폐쇄적 접근만으로는 기술적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 공동연구, 다국적 교육훈련, 연합 기술 거버넌스를 통한 제도화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CHIP 4, AUKUS, Horizon Europe, Quad Tech Network와 같은 기술동맹 모델의 적극적 탐색과 참여가 요구된다.

특히 국방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은 전략적 신뢰 형성의 핵심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전략형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협력을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할 핵심 자원은 결국 '사람', 즉 인재이다.

AI, 로봇, 양자기술을 국방 작전 및 체계에 통합하려면, 단순한 기술 숙련자를 넘어 군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전략적 사고력을 갖춘 융합형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 과학기술 교육과 군사 교육의 통합 설계
- 기존 국내 교육훈련 시스템의 재구성 및 유연화
- ERASMUS+, NATO 국방대학 프로그램과 같은 다국적 인재 교류 및 국제 공동 교육 플랫폼 구축

AI와 국방을 연결하는 '기술형 군사전문가'의 체계적 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 과제가 되었다.

### 3. 주요국의 기술-전략 경쟁

이러한 기술 전환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전략 경쟁은 이미 본격화되었으며,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주요국은 각기 상이한 제도적 방식과 전략을 통해 AI·첨단기술을 국방역량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AI 실행계획(America's AI Action Plan)』, 『국방 AI 채택전략(DoD AI Adoption Strategy)』, 『국방혁신단(DIU)』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지휘통제, 자율작전, 시뮬레이션 훈련 등 다영역 통합작전에 AI를 광범위하게 적용 중이다. DARPA와 민간 스타트업의 긴밀한 연계, NATO와의 AI 윤리·표준 협정 병행 등도 병행되며, AI를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승수(strategic multiplier)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군민융합(軍民融合)' 전략 하에 AI·양자기술을 민군 통합 구조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대학(국방과기대)』 등 특화 기관을 통해 대규모 군사 AI 인력을 양성 중이다.<sup>6)</sup> AI 기반 무인정찰기, 극초음속 미사일 제어, 전장 감시 시스템 등 고속 응용 기술에서 미국과의 기술격차 해소를 노리고 있으며, 자국 주도의 기술표준과 글로벌 영향력 확보를 병행하고 있다.

일본은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1-2025)』 및 『통합혁신전략2025』를 통해 AI, 로봇, 양자기술 등을 국가안보와 산업기반의 전략적 쌍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위대의 AI 기반 자동화 훈련체계 고도화, 미국과의 공동개발 및 정보공유 확대, 윤리·표준 논의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기술동맹과 규범형성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북한은 전반적인 AI·로봇기술 역량이 제한적으로 파악되나, AI 기반 사이버 침투 및 정찰 기술 관련 실험 정황이 일부 포착되었으며, 제재 회피 및 정보 수집을 위한 AI 응용이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자율무기체계나 무인 정찰도구에의 AI 통합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과 『2025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휘통제, 무인 전투체계, 디지털 훈련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술과의 연계 부족, 제도 유연성 결여 등 구조적 한계도 병존한다. 최근에는 공동 R&D 플랫폼 구축, AI 인재 양성 트랙 신설 등을 통해 민군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전략적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6) 왕슈옌. (2025). PLA의 가속화된 AI 통합 및 응용에 대한 분석, 국방안전쟁주보, 국방안보연구소, pp.1-7.

## 4. 전환기 기술에 대응하는 전략적 국방기술정책

“지식은 능력이 되어야 한다”

Carl von Clausewitz, On War, 147.

우리는 지금, 과거 인쇄술, 핵기술, 인터넷이 그러했듯, AI와 양자기술이 공학적 실현(Engineering) 단계에 진입하며 문명 전환기를 이끄는 시점에 서 있다. 이들 기술은 단순한 무기 성능의 개선을 넘어, 국가 안보, 국제질서, 사회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전환적 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ies)’로 작동하며, 그 충격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전환기의 충격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류는 기술 기반의 새로운 평화 질서를 형성할 수도, 혹은 통제 불가능한 전략적 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수용이나 성능 고도화를 넘어서는 총체적 전략 대응이다. 국내적으로는 국방기술혁신정책의 구조 개혁, 국제적으로는 제도화된 협력체계와 윤리·표준의 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AI와 양자기술은 국경을 초월하는 기술이다. AI는 글로벌 데이터와 알고리즘 생태계 위에서 진화하고, 양자기술은 통신·암호체계 전체를 전복할 수 있는 비선형적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내포한다. 단일 국가의 기술 통제만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으며, 데이터 접근, 인재 양성, 규범 수립, 기술 표준화 모두에서 국제적 연계와 공조 없이는 실질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특히 AI와 양자기술은 그 자체로 ‘힘(Power)’이 라기보다, 군사적 ‘능력(Capability)’으로 전환될 때 전략적 가치가 발휘된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기술만이 아니라 조직, 인재, 제도, 국제협력의 통합적 설계를 요구하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재설계가 요구되는 결정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방기술정책은 다음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첫째, 국제적 윤리·표준 정립 및 정합성 확보이다. AI·양자기술 기반 국방 응용을 위해서는 글로벌 표준과 윤리 규범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 간 상호운용성, 작전 책임성,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유되는 윤리 및 법적 원칙은 기술 신뢰와 군사 협력의 기반이자, 전략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

둘째, 공동연구·교육훈련 네트워크 기반의 전략적

신뢰 구축이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지만, 전략적 신뢰는 축적된 경험과 상호 이해를 통해서만 형성된다. 따라서 다국간 공동연구, 실험훈련, 장교 양성, 민·군 융합형 전문인력 교류체계가 핵심 인프라로 작동해야 한다. 이는 과거 냉전기 NATO 국방대학이 수행했던 역할처럼, AI·양자 시대에도 지식과 신뢰의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민감 기술의 국제 통제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자율무기체계, 감시·정찰 AI, 사이버 AI 등은 군사적 오용 시 전략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AI가 무기화될 경우, 확산 가능성과 군사적 오판의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국제 군사기술 거버넌스 체계는 선제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안보 리스크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AI와 양자기술이 본격적인 전환기로 진입한 지금, 국방기술정책은 기술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부문별 대응에서 통합 설계로, 국내 대응에서 국제 협력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한 군사력 증강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 질서의 설계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혁신 정책과 국제 안보 협력체계를 동시에 정렬해 나가야 한다.

**이춘주**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1991)을 전공한 뒤, 미국 UC 버클리에서 핵공학 석사(1997),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2005), 서울대학교에서 공학박사(기술정책, 2006)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방대학교 AI/로봇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AI 기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분석, MUM-T 임무계획, 인간-로봇 인터페이스, AI 기반 핵심 인프라 방호가 있다.(sarang90@korea.kr)

AI 전환기 국방기술혁신정책의 과제  
이춘주(국방대학교 AI/로봇학과 교수)

트럼프 2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이왕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 2기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이왕휘(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두 개의 경제 블록으로 분화
- 한반도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이 강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
-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추구

### 1. 머리말

2010년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회피하기 위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구성된 두 개의 블록으로 분화되고 있다.

미중 갈등은 한반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 및 대러 제재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면서, 냉전 시대

지속되었다 탈냉전시대 해체되었던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재등장하였다. 한국은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반면,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직접 참관하였다.

신냉전의 징후가 한반도에 확인해지면서, 탈냉전 시대에 형성되었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 —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사드 배치 직후 중국이 경제보복을 시도하면서 한중 사이에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중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에 첨단 장비를 반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해서 냉전 시대의 안미경미(安美經美)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상호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를 부과함으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 위해서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외관계의 실용적 접근방식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 협력을 더 강화하되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타협한다.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에 피해를 주는 않는 범위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이렇게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조가 약화되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 2.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초와 정책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국가이익과 실용주의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이익은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즉 전략의 설계·집행·평가는 국가 이익에 얼마나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실용주의는 유연하고 신축성이 있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전략이 교조적으로 적용된다면, 상황 변화에 대한 기민한 대응은 불가능하다.

현 정부의 이 전략은 전 정부 전략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전 정부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여, 한미일 협력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한일 관계의 개선이라는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소홀히 취급하여 북중러 삼각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러시아와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 조약의 제4조에는 “일방이

개별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 의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타방은 즉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25년 9월 3일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고 시진핑 주석과는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현 정부는 전 정부의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성과를 그대로 이어받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 이시바 총리순으로 통화하였으며, 8월에는 일본에 먼저 들른 후 미국을 방문하였다.

이와 동시에 현 정부는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중·한러 관계 개선은 상호배치되지 않는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면서도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주변 4강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다. 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여기에는 안보, 경제, 첨단기술의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군사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비핵화, 경제 동맹은 미국 최고의 ‘그린필드 투자국’, 첨단기술 동맹은 조선, AI, 반도체, 쿼터, 원자력 협력을 각각 추구한다.

8월 25일 첫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실효성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함께 북한에 대해서 큰 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한미 조선협력 방안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안보적 유대를 강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대일 정책의 목표는 견고하고 성숙한 관계의 구축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서틀 외교 재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 문화 등 분야 협력 및 미래세대 교류 확대 추진, 과거사 등 현안 관련 우리 기본 입장 견지를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지속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9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야당 대표와 국정 최고책임자 사이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은 지적하고 향후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가장 중요한 쟁점인 구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해외방문국으로 일본을 선택하였다. 방미 전 개최된 8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에 합의하였다.

대중 정책은 한중 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 관계, 경제적 유대,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중국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하는 중요한 인접국이다. 정상교류 및 전략적 소통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우호정서를 제고한다면, 사드 이후 제한되었던 양국 협력이 확대·심화될 것이다.

대중 관계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반중감정이 미국과 일본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다.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한 논란은 언제든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이 2022년부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이 10월 말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면 한중관계의 개선은 가속화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는 사드 배치 이후 지속되어 온 한한령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러 관계의 안정적 관리도 간과될 수 없는 목표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리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러시아에 철수하면서 손상된 권익을 복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 복원을 위한 공감대를 미리 확대해 놓아야, 휴전 이후 관계 복원이 쉬워질 수 있다.

### 3. 경제안보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추구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세적 보호주의로 압박하고 있으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으로 우리 수출품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탈냉전 시대 형성되었던 안미경중 구조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었다.

안미경중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한다. 첫째, 안미경중은 전략이 아니라 구조이다. 즉 역대 어느 정부도 안미경중을 전략이나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이 구조는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과 투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둘째, 안미경중 구조의 약화는 미중 전략경쟁보다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서 기인하였다. 대중 무역과 투자의 비중은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2013년에 이미 정점을 찍었다. 2015년 발표된 중국제조 2025가 성공적으로 완수되면서, 중국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을 압도하였다. 그 결과 1993년부터 계속되던 대중 무역흑자가 2023년 이후 무역적자로 반전되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반면 대중 수입이 줄어들지 않아, 대중 무역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안미경중 구조가 해체되면, 냉전 시대의 안미경미 구조가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대중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쉽지 않다. 2020년대 초반부터 대중 수출은 줄어들지만, 대중 수입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되면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역적자이다. 지난 30년 이상 대중 무역흑자는 총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대중 무역흑자가 무역적자로 반전되면,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트럼프의 보호주의가 유지되는 한, 미국이 중국을 대체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두 번째는 중국의 수출통제이다.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모두 대중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상호의존을 무기화할 경우, 이 산업의 공급망이 교란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도 문제다. 2020년대 초반

바이든 행정부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에 편승하여 우리 반도체, 배터리, 전기자동차 기업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2024년 상반기에는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추월하였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25%, 자동차 관세 25%,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50% 를 부과한 이후, 대미 수출은 하락세로 급속하게 반전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도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은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활용해 대미 투자를 확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인텔에 지분 10%를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 방식이 해외기업에도 적용된다면, 우리 기업도 미국 정부에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에 주어진 보조금 혜택도 IRA의 수정으로 폐지되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투자 요구이다. 7월 말 통상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투자 방식에 대해 양국 사이에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현금 출자, 대출, 보증의 세 가지 방식을 제안했는데, 미국은 전액 현금 출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0% 또는 외환보유고의 80%를 넘는 금액을 미국에 현찰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금액이 미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외화유동성 문제가 악화되어 환율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무제한 통화스왑을 미국은 거부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도 대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5년 9월 초 미국 이민세관집행국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급제동이 걸렸다. 미국 내에서 숙련된 엔지니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업비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고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직후 대미 투자에 대한 여론 악화도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안보에서도 갈등 요인이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분담금을 현행 1조5천억 원에서 13조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NATO 회원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GDP 대비 방위비를 현행 2.3%에서 5%로 2배 이상 증액하라는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유사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으로 배치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만약 대만해협에 주한미군이 파병된다면, 북한의 침략 위협이 커지는 것은 물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20년 이상 논의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국 사이에 아직 명확한 합의가 없다.

#### 4. 맺음말

국익중심 실용외교는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 한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이분법을 극복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대외정책의 기본축이다. 한중 관계의 개선은 이 기본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 관계가 안정되어야 한중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상쇄(trade-off) 관계가 아니다.

미중 전략경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선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다양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중국과 관세 협상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미국이 양국에 부과한 제재 대부분이 해제될 것이다.

이러한 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경제교류를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정책이 변경된 후에 진출하게 되면, 다른 국가의 기업이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 먼저 진출해 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왕희**는 2005년 런던정경대학교(LSE)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아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및 관심분야는 미중 전략경쟁, 동아시아 정치경제이다. 대표 저술로는 “US-South Korean Relations at a Crossroads: Uncertainty and Challenges under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Asian Survey』2025), 『한국안보의 이해』(명인문화사, 2025) 등이 있다(leew@ajou.ac.kr).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